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로 만난다

-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사회복지 정책 관련 대통령기록물 35건 공개
- 제헌헌법의 사회보장 조항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한눈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 및 영상 기록물 등을 9월 7일(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이달의 기록’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오늘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물 35건이다.

이번 기록물 공개를 통해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마련,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국가 책임 명시, 공공부조 도입부터 4대 사회보험 체계 완성까지

시기별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노쇠자·아동·임산부·근로 능력 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이 포함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의료보험의 당면 적용을 규정한 「의료보험법개정법률」을 통해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의 출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토대가 됐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의 기본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직장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출범시키고 단일 재정 체계를 구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관련 기록물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국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물도 함께 제공된다.

>> 장기적 사회 투자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맞춤형 복지의 확대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 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 사회투자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통해 능동적 복지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와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맞춤형 복지 확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관련 기록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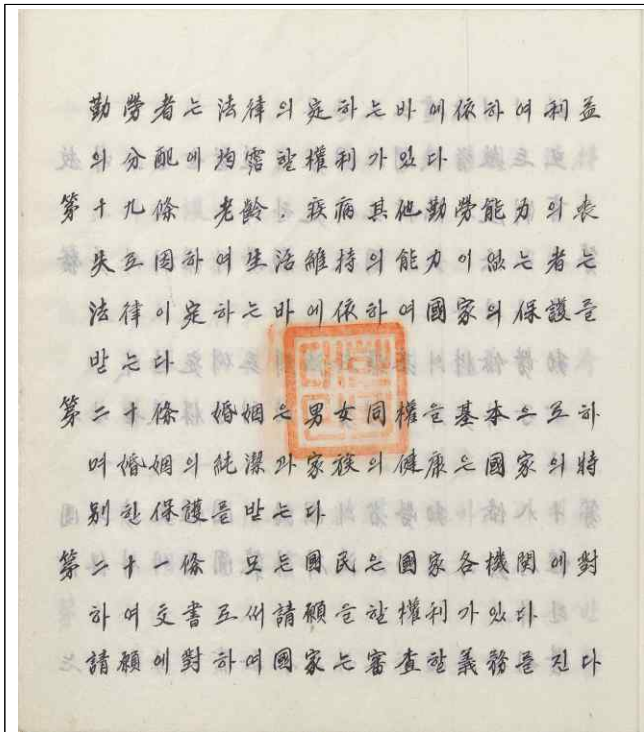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안대희 (044-211-2251)
		담당자	주무관	박서현 (044-211-2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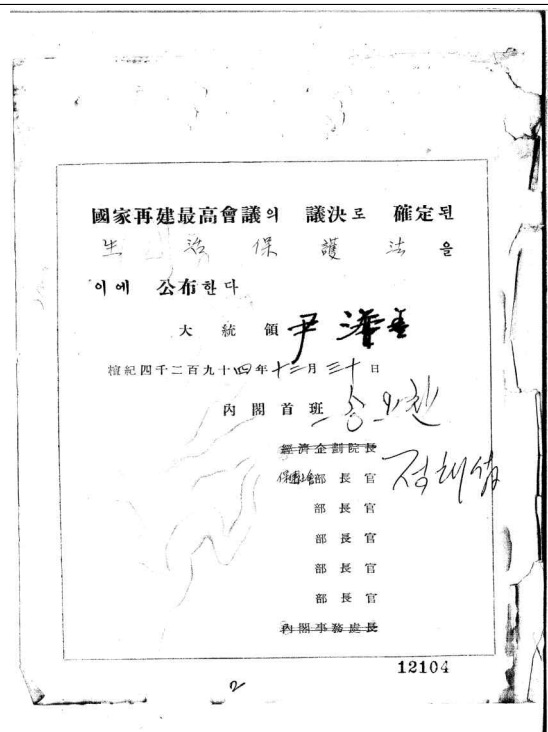


○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 관련 주요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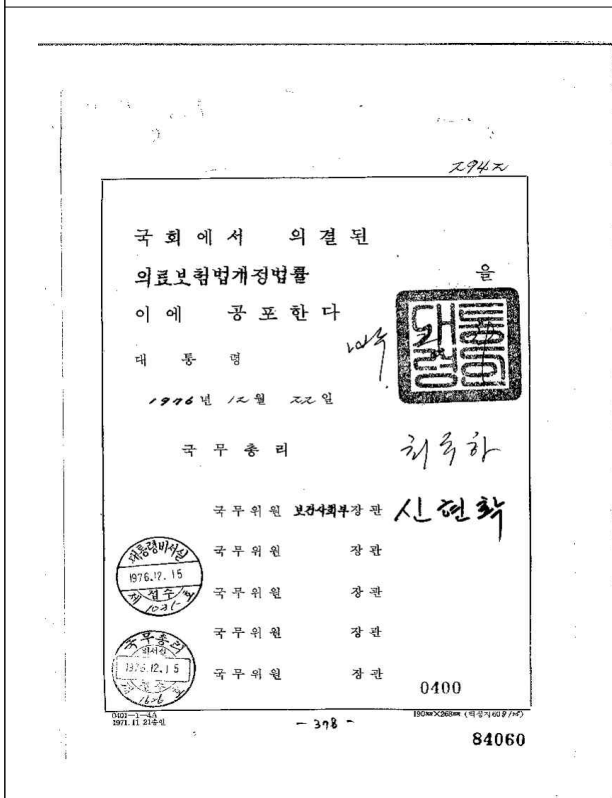
연번	대통령	생산기관	생산일자	기록물건명	기록물건번호
1	이승만	법제처	19480717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	A000063210000001
2	윤보선	법제처	19610201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	1A00614174536517
3	박정희	국무총리실	19790101	보건사회부(노동청)-보건분야(공중보건의관리강화),사회분야(인구대책의추진등),산재보험운영의내실화 등	1A00614175029558
4	박정희	법제처	19760201	의료보험법개정법률	1A00614175011352
5	박정희	서울특별시	19790201	서민생활안정대책	1A00614175028678
6	전두환	경제기획원	19860501	6차5개년계획중 국민연금제도 입방안	1A00614174542708
7	전두환	보건사회부	19870917	1988년도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1A00614174555974
8	전두환	보건사회부	19830705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개선편안	1A00614174555934
9	노태우	보건사회부	19880922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1988년도변경 및 1989년도 계획)	1A00614174606098
10	노태우	정무제2장관실	19890701	노인정책종합개선편안	1A00614174608814
11	김영삼	법제처	19931227	고용보험법(제4644호)	1A00614174624358
12	김영삼	기증_최양부	19940314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계획(안)	A000051810011941
13	김영삼		19950518	김대통령 국민복지기획단 보고회의 주재 및 격려	1A00614174621920
14	김대중	법제처	19990208	국민건강보험법(제5854호)	1A00614174949524
15	김대중	경제구조조정기획단	19990721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구축 방안	1A20710132857732
16	김대중	법제처	19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024호)	1A00614174949797
17	김대중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20000215	서민생활 안정대책	1A20712131735180
18	노무현	반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31201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추진현황	1A10922110120497
19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41002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추진현황 및 대책	A000000110027403
20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61128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A000000110038298
21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1003	기초노령연금 상황점검 관리체계 구축 보고	1010193100000957
22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0709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상황 보고	A000000110039391
23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30404	친필메모(보건복지부 업무보고)	1A00317173418498
24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60830	친필메모(비전 2030 보고회의(1))	1A00323102937801
25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0624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연설문	1010193100001346
26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11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방향에 대한 점검	1010193100011613
27	노무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071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새로마지플랜2010)	1A10928154124989
28	이명박	대통령실	20080710	(보고자료)노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	A000009410015519
29	이명박	대통령실	2011063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계획	1011188100000624
30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20140526	기초연금법 제정	1015039100001726
31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20150810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	1015039100002737
32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20151124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1015039100002800
33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20180731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2017.5.10.~2017.10.31))	B000081310000438
34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20180731	취임100일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2017.5.10.~2017.10.31))	B000081310000438
35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20201102	문재인 대통령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클린본)	C000081310018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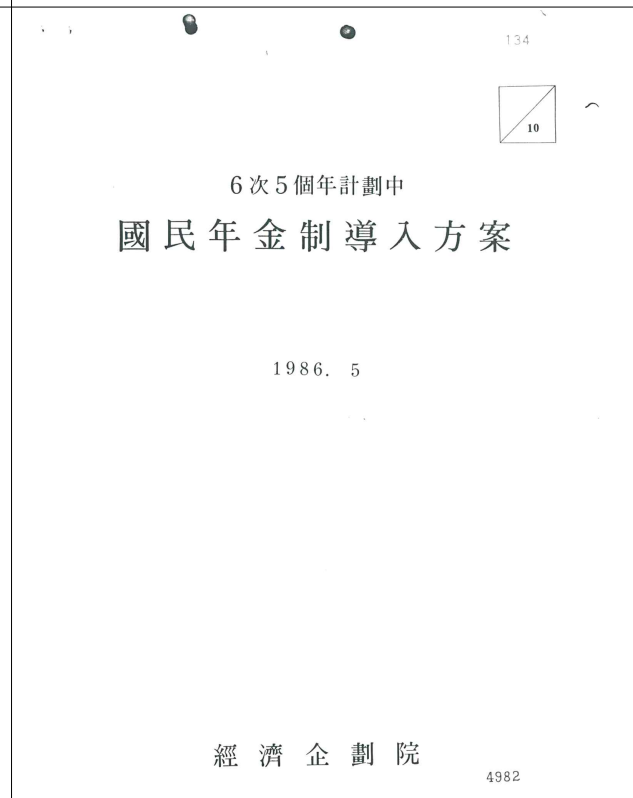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이승만 대통령,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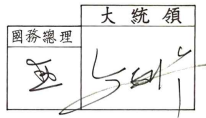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윤보선 대통령, 1961)



의료보험법개정법률(박정희 대통령, 1976)



6차5개년계획중 국민연금제도입방안
(전두환 대통령, 1986)



老人政策 綜合改善方案

1989. 7.

政務長官(第2)室

5

노인정책종합개선방안(노태우 대통령, 1989.7.)

1995-05-17 18:59 H4P POPAX DRIVER 1.0

(주)인텔리젟 소프트웨어 02-311-0000

부도자료 대통령비서실

金대통령, 「국민복지 기획단」 보고회의의 주제 및 격려

金泳三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3일 金대통령이 밝힌 「福祉構想」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족한 「국민복지 기획단」의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보고에서 기획단장인 李聖浩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에 총괄 및 재정, 보험제도, 복지프로그램 등 3개 본과위원회를 두고 21세기 우리나라 국민복지제도의 청사진과 합리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泳三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핵심 정책과제임을 강조하고,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한국형 복지공동체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국민복지 기획단」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복지 기획단」은 李聖浩 보건복지부 장관과 李東世 한국개발연구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金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

1

김대통령 국민복지기획단 보고회의의 주제 및 격려
(김영삼 대통령, 1995.5.1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生産的 福祉 構築 方案

1999.7.21

大統領 秘書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12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구축 방안
(김대중 대통령, 1999.7.21.)

국 회 에 서 의 결 된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을

이 에 공 포 한 다 .

대 통 령 김 대 중



1999년 7월 1일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관 김홍봉

국 무 위 원 장 관

국 무 위 원 장 관

1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김대중 대통령, 1999)

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 명에 이릅니다.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애와 삶까지 파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 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 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괴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환자와 보호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삶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 키워 가는 현장에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244 2017년 8월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 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주거·안전·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정책 제안에도 8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270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 연설문 (문재인 대통령, 2017.8.9.)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설문 (문재인 대통령, 2017.8.17.)